

INC, 온난화대책 합의 실패

CO₂ 억제대책 선진국·개도국 대립 … 공동실시 합의 못해

지구온난화 대책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이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다.

최근 국제연합 본부에서 기후변동경제조약교섭회의(INC)가 열려 쏠점이 된 2000년 이후의 온난화 대책에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, 3월28일부터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제1회 조약체약국 회의에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.

각국의 CO ₂ 배출량 현황 (단위 : 1000M/T, %)			
구 분	1990	2000(전망)	변동률
A U S	288,965	336,199	16.3
오 스 트 리 아	59,900	65,800	9.8
캐 나 다	561,200	510,000	10.6
체 크	163,584	135,536	▽17.2
덴 마 크	58,353	53,753	▽7.9
독 일	1,032,000	-	-
일 본	1,173,000	1,200,000	2.3
네 덜 란 드	174,000	167,600	▽3.7
뉴 질 란 드	25,530	29,550	15.7
노 르 웨 이	35,400	39,500	11.6
스 페 인	222,908	276,523	24.1
스 웨 덴	61,300	63,800	4.1
스 위 스	45,400	43,800	▽3.5
영 국	586,720	586,720	0
미 국	5,012,789	5,163,136	3.0

INC는 11회이면서 마지막인 이번 회의에서 CO₂ 배출량 억제 등 선진국 공약의 타당성과 복수국이 온난화대책을 공동실시하는 경우의 방법에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회의를 끝내 아쉬움을 더해주고 있다.

개도국은 선진국이 2000년시점에서 CO₂ 배출량을 90년 수준으로 억제한다고 하는 공약을 선결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

공동실시는 선진국에서 결정해야 되며, 시험적인 공동실시에서 얻어지는 CO₂ 배출량 삭감 등의 온난화방지 효과는 예측불허로 남아 있다.

<화학저널 1995/4/3>